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4 김종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
국가7급

문제편

PREFACE

「2024 국가7급 올패스 모의고사 선행정학」을 펴내며

지난 해에 높은 적중률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올패스 선행정학이 올해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4 올패스 선행정학 국가7급 모의고사」는 PSAT 도입 이후 최근 7급 행정학이 9급 과는 출제의 폭과 깊이 면에서 한층 난이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첫째, 철저히 2024 국가 7급 시험에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맞추어 26회분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신경향 이슈를 포함한 참신한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 3회분의 문제를 추가하여 총 26회분의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법령 제·개정사항(「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분권법」, 「주민발안법」, 「공무원노조법」 등)은 물론, 2023~2024 기출문제 경향까지를 모두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문제도 개편내용에 맞게 모두 수정하였으며,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로 개편된 지방분권정책 추진체계와 지방계층체계 등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행정학이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고난도 법령문제나 응용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신한 법령문제와 응용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비율을 보면, 최근 기출문제 30% + 기출문제 변형 40% + 신경향 응용문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최근 시험장에 가면 늘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최근 개정판 저서들을 참고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각종 행정학 이슈들을 중심으로, 신경향의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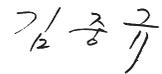
다섯째, 각 회별로 예상평균점수와 상위20% 점수를 Test Stats로 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문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접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며, 이 모의고사결과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서 받게될 성적표나 마찬가지이니,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이론 테스트도 아니고 단원별 문풀도 아닌 전범위 동형문풀 점수로 말해주는 것이니만큼, 전범위 동형문풀 모의고사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점행정학은 열정 있는 강의와 교재, 그리고 열정 있는 공부의 만남이 완성됩니다. 열정으로 만들어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시리즈와 여러분들의 열정 있는 노력이 합쳐져 부디 만점행정학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정을 바친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더욱 새로워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국가7급 모의고사」로 2024 국가 7급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0.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CONTENTS

PART 문제

제01회 모의고사	10	제14회 모의고사	114
제02회 모의고사	18	제15회 모의고사	122
제03회 모의고사	26	제16회 모의고사	130
제04회 모의고사	34	제17회 모의고사	138
제05회 모의고사	42	제18회 모의고사	146
제06회 모의고사	50	제19회 모의고사	154
제07회 모의고사	58	제20회 모의고사	162
제08회 모의고사	66	제21회 모의고사	170
제09회 모의고사	74	제22회 모의고사	178
제10회 모의고사	82	제23회 모의고사	186
제11회 모의고사	90	제24회 모의고사	194
제12회 모의고사	98	제25회 모의고사	202
제13회 모의고사	106	제26회 모의고사	210

2024년 10월 12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제2과목	행정법
제3과목	행정학	제4과목	경제학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

0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 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 ③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전문지식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 ④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직업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02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축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03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04 신제도론의 유파별 입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유파별 공통된 입장이다.
-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을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보다는 넓게, 그러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보다는 좁게 인식한다.
- ③ 경로의존성과 잠금효과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지속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 ④ 권력불균형과 우연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이다.

제2회 모의고사

01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의·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02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에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행정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신중성 외에도 독자성과 상시성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에는 최소한의 상임위원과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달리 5년이라는 존속기한이 있다.

03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②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04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주민투표 실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다시 부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②	07	④	08	①	09	①	10	④
11	②	12	①	13	③	14	③	15	③
16	②	17	②	18	④	19	③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③	25	③

01

2024 선행정학 p.461 ②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총원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행정조직의 관료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 ☑ ① [○]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 ③ [○]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채용당시의 구체적 전문지식보다는 연령이나 학력을 제한하여 잠재능력이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 ④ [○] 공직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폐쇄형에 의한 일체감과 연대감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사기 제고	①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② 인재 발굴	②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 무사안일
③ 연대감 향상	③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④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 제고	④ 참여적 관료제 저해
⑤ 고위 공직자의 양성	⑤ 자격 제한 - 비민주성
⑥ 능력발전 기회 부여	⑥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⑦ 행정의 전문성 저해 - 일반행정가 주의
	⑧ 공직의 침체와 보수화 · 폐쇄화
	⑨ 승진 적체와 승진 지망의 과열

02

2024 선행정학 p.816 ④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종류별 구체적인 사무는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사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

- ☑ ① [×] ①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을 설명하는 지문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 ② [×]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법 제15조).

- ③ [×]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 · 군 및 자치구에 서 먼저 처리한다(법 제14조).

03

2024 선행정학 p.416 ②

★★

X-비효율성은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이 아니라 정부의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과 같이 경쟁의 부재(결여)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말한다.

- ☑ ① [○] 주인-대리인 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로 가정한다.
- ③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정보격차)으로 인하여 합리성이 제한되고 그로 인하여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지 못하여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 발생한다.
- ④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잘못 선택하거나(역선택), 대리인이 주인에게 불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

04

2024 선행정학 p.153 ③

★★

경로의존성과 잠금효과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지속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경로의존성이란 이미 형성된 제도가 자기강화의 과정을 통해 역사적 경로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잠금효과란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제도가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정권교체후에도 제도가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변하지 않게 하는 점착성(Stickiness)과도 연관되는 속성이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제도의 지속과 변동요인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역사적 신제도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지속		① 잠금효과 ¹⁾ (Lock-in Effect) ② 경로의존성 ²⁾	① 동형화(수렴) ³⁾
변동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 ② 선호의 변화 ③ 협상	① 단절적 균형 ⁴⁾ ② 권력의 불균형성 ③ 우연	① 탈제도화 ⁵⁾

- 1)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도가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잠금효과라고 하며, 이는 정권교체후에도 제도가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변하지 않게 하는 점착성(Stickiness)과도 연관됨.
- 2)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형성된 제도가 자기강화과정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역사적 경로에 따라 지속되는 관성을 말한다.
- 3) 동형화란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조직구조의 형태가 비슷해져 가는 적절성의 논리
- 4) 단절적 균형 또는 결절된 충격이란 역사적 사건이나 대전환점(위기 등)에 의하여 제도가 급격히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5) 탈제도화란 현존 제도의 정당성이 약해져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체제론은 체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투입되어 불균형상태가 될 때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 ☑ ① [○] 오스트롬(Ostrom)은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행정학의 초점을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나 월슨의 정치행정이론처럼 행정은 정치영역밖에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정치영역 안에 있는 서비스전달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② [○] 법률·제도적 접근법은 구제도론으로서 공식적이고 정태적인 제도나 법률에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있는 제도나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 ③ [○] 행태주의는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세계만을 다룬 나머지 현실문제의 해결이나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험적 보수주의(empirical conservatism)에 빠지기 쉽다.

★★

반대이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으로 인해 국가기관 같은 공식기관이나 이익집단 등 특정 세력이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없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도 공식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패턴이나 상호인지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결정되어진다고 가정한다.

- ☑ ① [○] 정책의 내용 및 환경의 복잡성을 가정하며, 다양한 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③ [○] 하위정부(철의 삼각)모형은 공식적 참여자(관료, 의회상임위원)와 비공식적 참여자(이익집단)가 제한된 참여 속에서 폐쇄적이고 안정적 연합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 ④ [○]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나 이슈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정책공동체와 하위정부모형은 분야별로 다양한 모형이 형성되며, 정책공동체는 특정 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로, 하위정부모형은 해당정책분야에 관계가 있는 관료, 상임위원, 이해관계자들로 각각 제한된 전문영역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한 없이 완전 개방된 이슈공동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지속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지속적)
행위자간 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관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규모	작음	큼	중간

☞ 이상관-철

★★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규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 ☑ ① [×] 정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원 추계소요자료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국가재정법」 제87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가 있다(「국회법」 제79조의 2).
- ② [×]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지만, PAYGO(Pay As You Go)제도는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87조에 규정된 재정소요추계제도가 PAYGO제도에 해당한다.
- ③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88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소속 공무원들간에는 직무상 관련성 유무에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증여도 금지되어 있다.

- ☑ ② [×] 파면은 해임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다. 급여의 1/4 내지는 1/2의 지급이 제한된다.
- ③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틀리다.
- ④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며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 징계의 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경징계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중징계
강등	1등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칙상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 해3~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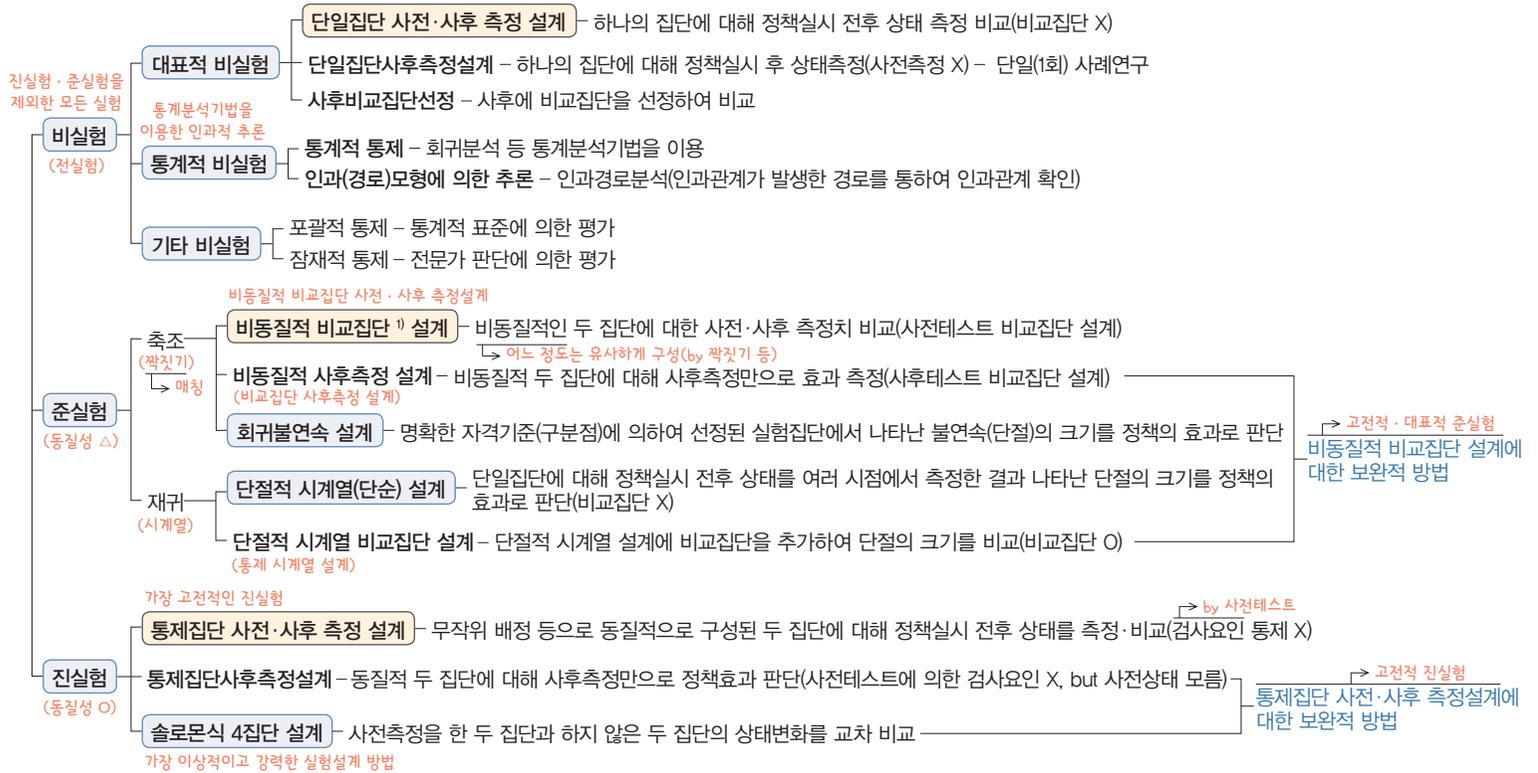
★★

강제배분법은 등급분포비율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평가대상자 대부분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관대화나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주는 집중화(중심화) 경향을 피하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사용하지만, 강제배분법은 등급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대상자들을 거기 끼워 맞추는 **역산제의 우려**(점수를 부여한 후 각 등급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평가자에게 배치할 등급을 먼저 고려하여

험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한 실험설계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 ④ [○]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실험설계방식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져 외적타당성을 저하시키는 진실험보다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준실험설계방식이다.

📌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의 종류



1) 준실험은 비교집단이 실험집단과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한 통제도 안 되므로 통제집단 대신 비교집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64.2점	67.4점
상위 20% 예상점수	81.3점	85.2점

제2회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①	09	③	10	④
11	①	12	①	13	③	14	③	15	①
16	③	17	③	18	③	19	②	20	②
21	④	22	②	23	①	24	①	25	③

01

2024 선행정학 p.581 ④

★★★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부할 수 없다. 국회의 예산심의를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 ☑ ① [○] 예산의 제출권자는 정부이지만, 법률의 제출권자는 정부와 국회이다.
- ② [○] 법률은 국회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 예산은 공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국회(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지만, 법률은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정부동의 없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필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포	공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02

2024 선행정학 p.395 ①

★★

법 제5조에 규정된 행정위원회 설치요건으로 맞는 지문이다. 자문위원회는 독자성과 상시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 ② [×] 자문위원회에는 행정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과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다(법제8조).
- ③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을 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법제8조).

- ④ [×] 행정위원회도 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존속기한규정이 신설되었다(법 제11조, 2023.5. 시행).

03

2024 선행정학 p.819 ④

★★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에는 관여할 수 없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 ① [○] 라이트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 관계를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3가지로 구분하였다.
- ② [○] 엘코크의 대리인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자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 ③ [○]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에서 위임한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규율된다.

☞ 정부 간 관계(IGR) 모형

학자	모형		
D.Wright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Elcock	동반자모형	대리자모형	교환모형
Kingdom			소작인모형
Nice	경쟁형(대립형)		상호의존형
Muramatsu	수평적경쟁모형	수직적통제모형	
Rhodes	동반자모형	대리인모형	전략적협상형
Dunsire	지방자치모델	하향식모델	정치체제모델
Wildavsky	갈등-합의모형	협조-강제모형	
Griffith	동반자형	대리인형(영국)	
Chandler			지주·마름모형

04

2024 선행정학 p.854 ③

★★

2022.4. 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8조의2).

- ☑ ① [×]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주민투표 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법 제7조).
- ② [×] 반대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법제21조).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9조).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년 7월 22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값 28,000원
ISBN 979-11-92405-57-5